

대통령 파면된 국정농단 사건 4년 3개월만에 마침표

박근혜 징역 20년 최종 확정

최순실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촉발

18개 혐의 1심재판 기록만 14만쪽

가석방·사면 없다면 2039년 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4년 3개월여 만에 대단원이 마무리됐다.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오면서 국가적으로 큰 파문을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번졌고, 결국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전직 대통령의 중형 선고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사상 초유 '대통령 파면' 부른 국정농단 사건=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거론되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 이후였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최씨가 이를 받아

보고 고쳤다는 의혹은 국정개입 논란으로 확장돼 파장을 키웠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귀국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소 됐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시작됐다. 탄핵초추안은 같은 해 12월 발의돼 찬성 234표·반대 56표로 가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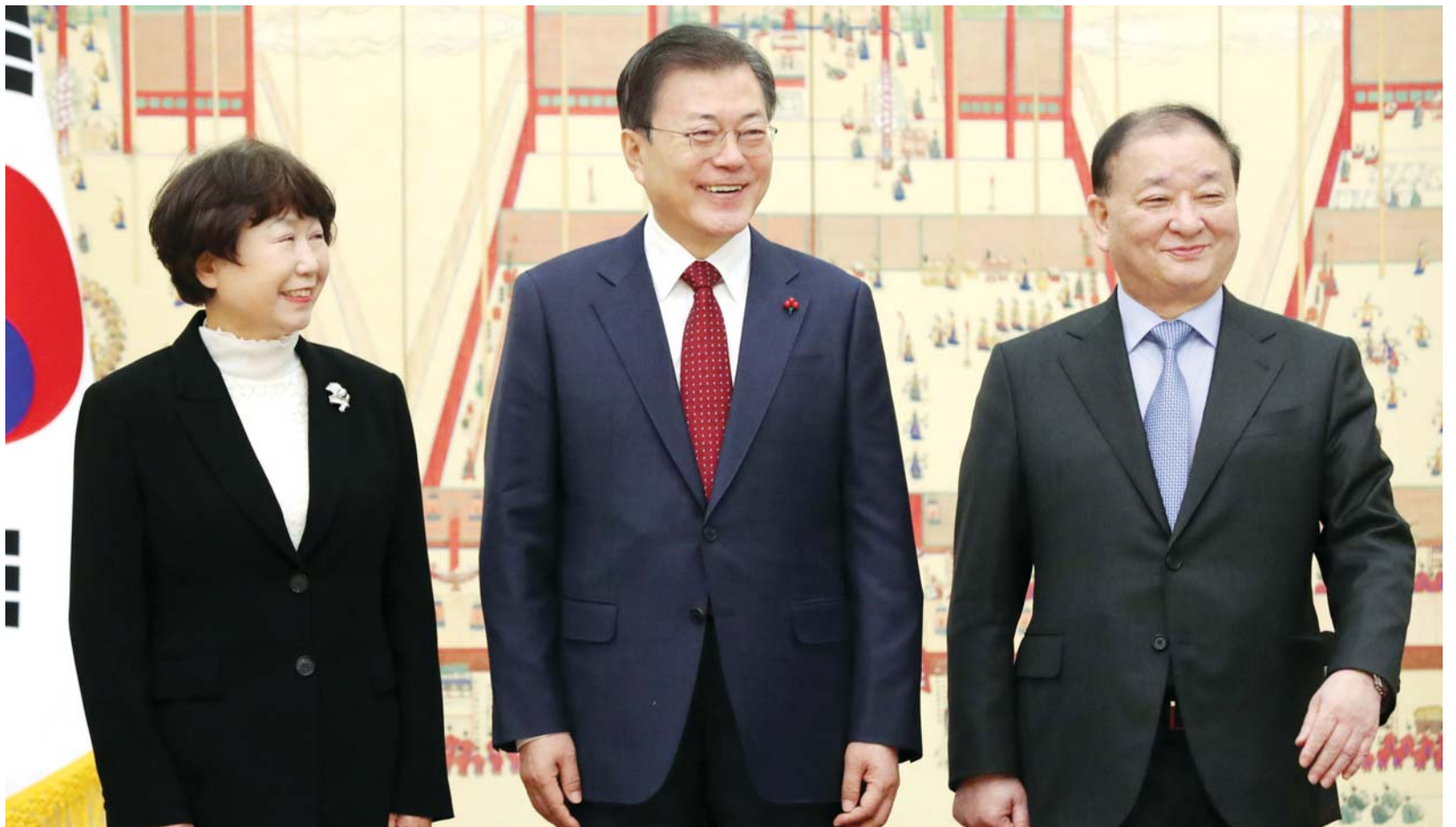
같은 달 21일엔 박영수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검총장(현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18개 혐의 적용…1심 판결까지 사건기록만 14만쪽=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31일 구속됐고 2주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무려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소 이후 약 1년 만이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130여명, 사건 기록은 14만쪽에 달했다. 2심에서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변호인들은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사인계를 제출했고 박 전 대통령은 방어권을 포기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석방 없이 형기 채우면 2039년 출소=박 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강 대사와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도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고민 깊어질 듯

신년회전서 입장 밝힐 가능성

여론 부정적... '불가' 쪽 무게

'통합' 화두 상반기 단행 관측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나선 뒤에도 일절 언급을 삼갔고, 청와대도 대법원 판결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일단,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변 형식을 통해 특별사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장 특별사면을 검토하기 보다는 국민 여론을 보며 결정하는 수순을 밟지 않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특히, 여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 정서를 고려하면 '사면 불가' 쪽에 더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최재성 청와대 정부수석도 지난 13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여론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내에 특별사면을 결단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국정 부당과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는 '선별사면'으로 절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는 3월 사퇴를 앞두고 사면 필요성을 먼저 꺼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총장'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관측도 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차기 대선 정국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자연스레 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신중해야" 국민의힘 "빨리해야"...사면 두고 벌써 갑론을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서 최근 불거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사안 자체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며,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4일 "당 입장은 이미 정리했는데 더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라면서 "곧 있을 연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쫄봄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만큼 개별 의원

들 차원에서는 사면 반대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면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당내 인사들도 있어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갈거리 찢어져 적대적 분열과 증오가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며 사면론에 대해 "그런 것들을 씻어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선의의 발로"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중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른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론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이른바 '선별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형량이 더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부수석을 지낸 박형준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를 보고 오히려 상대 지지층을 보는 폭넓은 안목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Passion Vision Truth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과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3학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인문	신 학 과	13	1		
	한국어교육학과	4			4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15	1		
사범	유아교육과	2		1	
예능	음악 학 부	8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 12(화) ~ 25(월)
· 전 형 일: 2021. 1. 29(금) 오후 2시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6
		성경연구학과(Th.M.)	2
		신학과(Ph.D.)	3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3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3
		신학과(Th.M.)	4
		유아교육학과(M.Ed.)	3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8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6
		재활심리치료학과(M.A.)	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8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17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 전 형 일: 2021. 1. 29(금) 오후 2시 30분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 전 형 일: 2021. 1. 29(금) 오후 3시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